

# 환경 계획

(A)

(1번~20번)

(7급)

1. 나고야의정서(Nagoya Protocol)와 가장 관계가 깊은 협약은?  
① 생물다양성협약(CBD)  
② 기후변화협약(UNFCCC)  
③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  
④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(Ramsar Convention)
2.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 
①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방출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.  
② 탄소발자국은 일반적으로 global hectares(gha) 단위로 측정한다.  
③ 탄소발자국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자원의 양을 토지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그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다.  
④ 1차 탄소발자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품의 전 생애과정에서 배출되는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측정치이다.
3. 다음 중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 
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%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한다.  
②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교통관리,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적인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다.  
③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신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.  
④ 대기환경규제지역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점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다.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① “환경기준”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.  
② “환경훼손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  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보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  
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·훼손을 방지하고 오염·훼손된 환경을 회복·복원할 책임을 지며,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5. 도시지속성지표로서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PSR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① 생태계적인 시점, 즉 “부여받은 자연환경”과 “이를 이용해 생활하는 인간과의 관계”를 중심으로 구성한다.  
② P는 과거 환경의 질(Properties)을 의미하며 인간의 간섭이 없는 때를 가정한다.  
③ S는 현재상태(State)를 의미하며 자연혜택의 지표이다.  
④ R은 대응(Response)을 의미하며 도시환경질에 대한 지표이다.
6. 압축도시(compact city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 
①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  
②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  
③ 보행 중심의 생활권 설계  
④ 도시 내부에 대규모 녹지 확보
7. 2015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's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 
① 새천년개발목표(MDGs)의 후속 의제로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새로운 목표이다.  
② 8개 목표·21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, 이 중 빈곤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.  
③ 국내외의 경제·사회 등 각종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.  
④ 정부, 시민사회, 민간부문 등이 참여하여 설정하였다.
8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·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  
②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면적 10만m<sup>2</sup> 미만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 항목을 정할 수 있다.  
④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, 토지이용 구상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9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구역이 아닌 것은?  
① 개발제한구역  
② 시설보호구역  
③ 도시자연공원구역  
④ 시가화조정구역
10.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?  
Holling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복수의 안정적 평형 상태(multiple stable equilibria)를 가진 생태 시스템이 외부 교란이나 충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흡수하여 기존의 안정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준의 능력
- ① 생물군계(Biome)  
② 에너지(Energy)  
③ 리질리언스(Resilience)  
④ 지속가능개발(Sustainable Development)

11. 환경부에서 제작·공급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·생태적 평가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보존성
  - 자연성
  - 희귀성
  - 다양성
12. 환경계획에서, 경관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분석된 각 경관 단위를 통합하는 접근인 생물지리지역 접근의 구분 방법과 특징으로 옳은 것은?
- 생물지리지역 접근은 자연자원만을 고려하는 방법이다.
  - 생물지역(bioregion)은 생물지리학적 접근 단위의 최하위 단위이다.
  - 하부생물지역(subregion)은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대한 친밀한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, 특정지역으로 인식하기도 한다.
  - 생물지리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‘유역차원의 접근’과 ‘생태적 단위 접근’이 있다.
13. 토지의 환경성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?
- 녹지자연도 분류기준에 따른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억제된다.
  - 생태·자연도 평가기준에서 별도관리지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.
  - 개발제한구역 평가기준에 따라 경사도 5° 이하의 토지는 5등급에 해당한다.
  - 광역토지이용도시계획에서 장래 개발의 여지가 충분한 지역은 도시용지로 구분한다.
14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한다.
  - 관할 시·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,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  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  -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징수하였다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정도에 준하는 환경복구사업을 수행하면 징수한 부담금을 반환한다.
15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핵심구역, 완충구역, 전이구역으로 구분한다.
  - 지역의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  -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한다.
  - 환경부장관은 생태·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16. 우리나라 「환경정책기본법」상 대기환경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, 「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」상의 대기환경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?
- 벤젠
  - 일산화탄소(CO)
  - 아황산가스(SO<sub>2</sub>)
  - 미세먼지(PM-2.5)
17.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?  
(단, 「생태면적률 적용지침(2016)」에 따른다.)
- 산지의 개발사업
  - 도시의 개발사업
  -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
  - 폐기물 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
18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. 다음 규모의 개발계획 시 확보해야 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기준은?  
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30만m<sup>2</sup> 이상 100만m<sup>2</sup> 미만의 개발계획
- 상주인구 1인당 3m<sup>2</sup>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% 이상 중 큰 면적
  - 상주인구 1인당 5m<sup>2</sup>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7% 이상 중 큰 면적
  - 상주인구 1인당 6m<sup>2</sup>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% 이상 중 큰 면적
  - 상주인구 1인당 9m<sup>2</sup>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% 이상 중 큰 면적
19. 「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」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주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- 자연공원
  - 습지보호지역
  - 생태경관보전지역
  - 야생동식물보호구역
20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시·도의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수립한 후 6개월 이내에, 변경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한다.
  -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